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5년 8월 27일(목) 09:00 배포시
담당자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044-550-4046, dccho@kdi.re.kr)
배포일시	2015년 8월 27일(목)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KDI 정책세미나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

- 발표 요약 -

- 일 시: 2015년 8월 27일(목) 09:30~12:20
- 장 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장(2F)
- 주 최: KDI

- KDI는 8월 27일 '우리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함.
- 우리 인구구조는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저성장·저물가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점점

- 이번 세미나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및 구조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교훈 삼아 우리 경제의 개혁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
- 김준경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며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과거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던 우리 경제의 역동적인 시스템이 경쟁적 시장구조의 고착화 등으로 인해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가 대내외 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제도 개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밝힘.
- 이어 “우리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구조 개혁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과거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구조 개혁 실천에 있어 일본의 선례를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힘.
- 세미나는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와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의 ‘우리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
-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1990년대 일본경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 및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제안함.
-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 및 구조개혁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

- 세미나에는 김준경 KDI 원장,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종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장,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실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등 관련 분야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함.

- ❖ **첨 부 1. 프로그램**
- ❖ **첨 부 2. 발표 요약**

❖ 첨부 1.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09:00~09:30	등 록
09:30~09:35	개회사 김준경 KDI 원장
09:35~10:25	<p>발 표 1. 우리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p> <p>발 표 2.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p>
10:35~12:20	<p>종합 토론</p> <p>사 회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p> <p>토 론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종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장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실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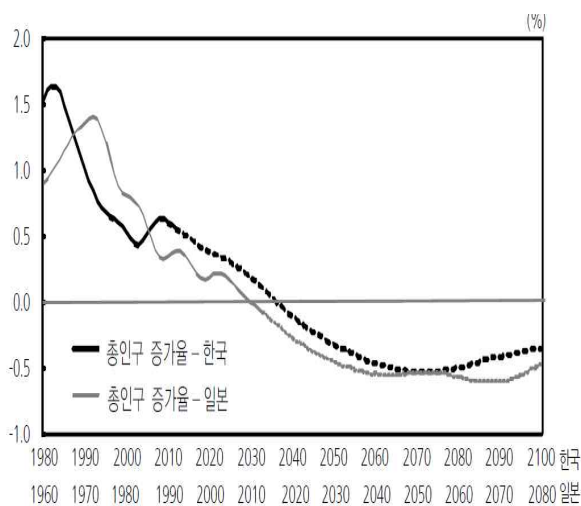
❖ 첨부 2. 발표 요약

발표 1. 우리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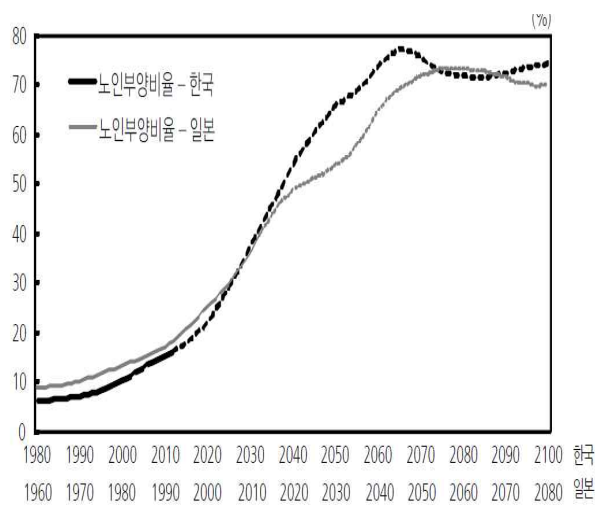
- 최근 한국경제 인구구조 관련 모든 지표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거의 그대로 쫓아 가고 있음.
- 인구구조 고령화는 총량적 차원의 인구증가율 둔화 외에도 연령별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총인구증가율 추이 >



주: 실선은 실적치, 점선은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2.

< 노인부양비율 추이 >



주: 실선은 실적치, 점선은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2.

- 우리나라 일인당 소득은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3만 불*(2011년 국제 불변가격, PPP 기준, World Bank) 내외까지 증가했으나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은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

* 1990년 일본: \$29,773, 2010년 한국: \$30,475

< KDI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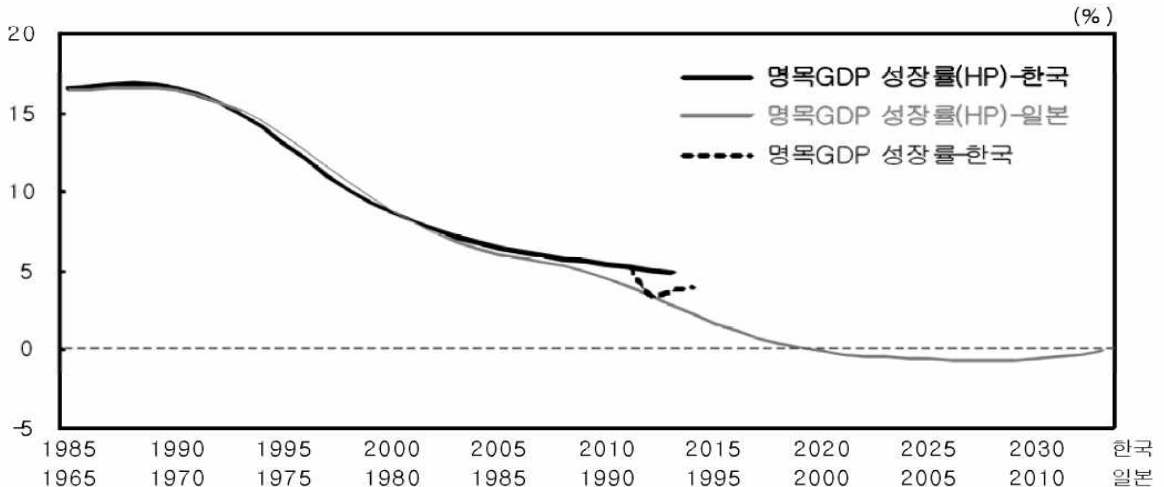
(단위: %, %p)

	실질GDP (1+2+3)	취업자 수 (1)	물적자본 (2)	중요소생산성 (3)
2001~2005년	4.6	0.9	2.1	1.5
2006~2010년	4.0	0.5	1.8	1.7
2011~2015년	3.1	1.0	1.3	0.8
2016~2020년	3.0	0.4	1.0	1.6
2021~2025년	2.5	0.1	1.0	1.4
2026~2030년	1.8	-0.2	0.8	1.3
2031~2035년	1.4	-0.4	0.5	1.3

주: 1) 실질GDP 증가율은 5년 기간의 단순평균이므로, 로그차분으로 측정된 요인별 기여도의 합과 조금 다를 수 있음.
2) 2014년까지 결과는 실적치에 기반한 성장회계 결과임.

- 특히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명목 GDP 성장률 추이는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임.

< 명목 GDP 성장률 추이 >



주: 실선은 실적치, 점선은 KDI 전망치임.

자료: (한국) 한국은행, 「국민계정」; (일본)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한편,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는 탄력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에는 지나치게 경직, 향후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
-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추격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 탄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더욱 긴요한 상황

○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 관련, 성과가 좋지 못한 산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 속도가 과거에 비해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정규직 vs. 비정규직'뿐 아니라 근로자간의 산업간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조선 및 건설업 등에서 좀비기업(이자보조의 성격으로 비정상적인 지원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하락하는 모습

○ 이와 같은 요소시장의 경직성을 반영,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자원배분 효율성은 점차 저하되는 추세

□ 따라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 기조 설정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

① 임금피크제 등 연공서열보다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는 한편 기대수명 증가에 비례하여 근로연령을 늘릴 필요

②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

* 정규직 과보호 축소, 부실기업 인식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산재해 있는 정책금융 축소, 각종 중소기업 보호정책 축소,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 등

③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잠재적 부실가능성을 축소하는 한편 통화정책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예: 연 2~3%)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

* 1990년대 일본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통화정책 목표에 '금융안정'이 추가된 점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를 훼손시킬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④ 고령화 및 복지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통제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감면 정책을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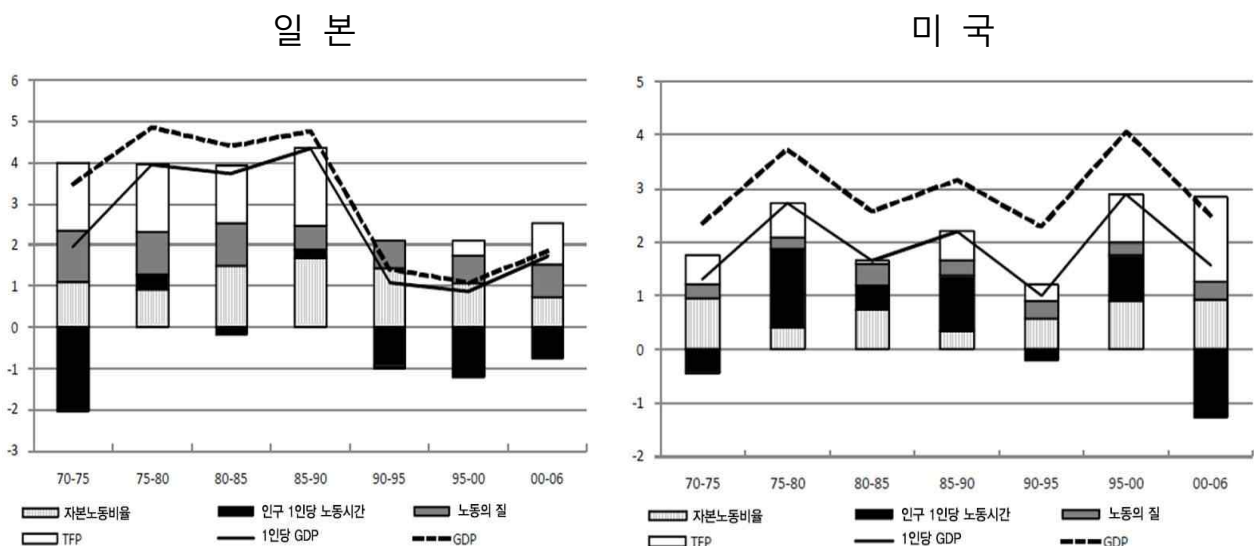
발표 2.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 일본 장기 불황의 원인

-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 원인 중 하나로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기능 부전 또는 제도 피로가 지적됨.
 - 고도경제성장 시대에는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일본형 경제시스템이 1990년대 이후 바뀐 경제 환경 하에서 오히려 경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 일본경제 장기 불황 연구를 통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일본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음이 증명됨.
 - 일본경제 장기 불황의 원인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상승률의 장기적 하락이 꼽히고 있으며 (그림), 경직적인 노동시장 관행이나 간접금융 의존적인 자금 시장으로 인한 유동성 제약이 TFP 상승률 하락 요인으로 지적

< 그림. 1인당 GDP의 하락 요인 >



출처) JIP데이터베이스 2009.

출처) EU KLEMS 2008년 3월판.

2. 구조 개혁 추진 현황

□ 구조 개혁이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 정책 목표가 되기 시작 한 것은 불황의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호소카와 내각부터임.

○ 이후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에 이르기까지 구조개혁은 일본정부의 일관된 정책목표였음.

□ 기존 일본형 시스템을 보다 시장지향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구조 개혁의 방향

○ 고이즈미 내각은 2001년 발표한 구조 개혁 기본방침을 통해 구조 개혁을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선언한 바 있으며, 규제완화와 민영화(행정개혁)를 구조 개혁의 중심 수단으로 삼음.

3. 구조 개혁 추진 결과

□ 일본의 구조 개혁은 부분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으나 시장지향적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목표에서는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고용시스템 개혁을 통해 고용시장의 유동화 정책을 시행, 입직률 및 전직률, 고용조정속도가 상승하는 성과가 나타남.

○ 그러나 이는 주로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 정규직에서는 여전히 장기고용을 선호

- 고용시장의 유동화 정책은 인적 자원 육성 측면에서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 기업 내 숙련 형성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인적 자원 육성 방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1990년대 말 ‘일본판 금융빅뱅’을 계기로 금융시스템의 자유화는 크게 진전되었으며, 기업 자금조달 방식이 간접금융 중심에서 직접금융 중심으로 바뀜.

- 그러나 일본의 경우, 기업 간 주식 상호 보유가 여전히 주식 보유 비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직접 금융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음.
-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조한 리스크머니의 공급이며 기관 투자가는 채권 중심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벤처캐피털의 역할도 아직은 취약

- 현금과 예금 중심의 가계 자산구성이 이의 배경으로 지적

□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메인 뱅크 기능 및 종업원 주권의 약화, 기업 간 주식 상호보유 비율 저하, 외국인 및 개인투자자의 주식 보유 비율 상승 등을 통해 주주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회사 제도 보급은 대단히 저조한 상태이며 사외이사 선임 또한 진전되고 있지 않음.

4. 지지 부진한 구조 개혁

□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취약

- 구조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고이즈미 내각이 구조개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고이즈미 수상 개인의 강력한 개성 외에 소선구제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 내각부의 강화 등으로 수상 및 당총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
-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고이즈미 수상 개인의 개성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 고이즈미 이후 내각에서는 구조개혁 추진이 후퇴

□ 시장지향적 시스템이 기존 일본형 시스템에 비해 반드시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 존재

- 일본형 시스템의 핵심적 특징인 장기적 거래 관계의 장점이 적용될 수 있는 산업부문은 여전히 존재함.
- 통합형 제품설계 아키텍처 산업에서는 여전히 장기적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한 미세 조정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
 - 특히 통합형 아키텍처인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 기업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력은 장기고용 및 장기 거래를 전제로 한 기업 내 숙련 형성, 하청시스템에 의존하는 바가 큼.
- 통합형 제품설계 아키텍처 산업에서 일본형 시스템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시장지향적 시스템으로의 일률적 개혁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의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상황은 성격이 다양한 시스템이 병존, 진화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음.

5. 향후 구조 개혁 추진 방향

□ 정치적 리더십 강화

-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현재 일본의 정치체제는 과거에 비해 수상의 권력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제도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상 개인의 개성이나 정치적 수완에 크게 의존

□ 인적자원 양성체제 개혁 또는 강화

- 일본기업은 장기고용을 선호하는 것은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 기업 내 숙련 형성 때문임.
- 유동적인 노동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에서도 숙련을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리스크머니 공급자 육성

- 금융시장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리스크머니 공급자의 역할은 저조
- 벤처 캐피탈 등 리스크머니 공급자 육성 정책과 함께 가계 자산 구성을 예금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구성으로 유도하는 정책 필요

□ 불평등 및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 시장지향적인 구조개혁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이나 소득격차 확대를 수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